

월간

나라 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08 / Aug. 2017

08

기획 특집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성과와 추진방향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재정 논단

예산의 범위 및 구분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재정이슈포커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성과와 정책 방향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예산성과 우수사례

법과학 분석 기법의 자체적 개발을 통한
신속한 첨단 범죄 대응 및 예산 절감 실현
김홍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연구사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나라재정 배움터
국가재정과 정부 기능



7725094837000
ISSN 2508-6971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작: ST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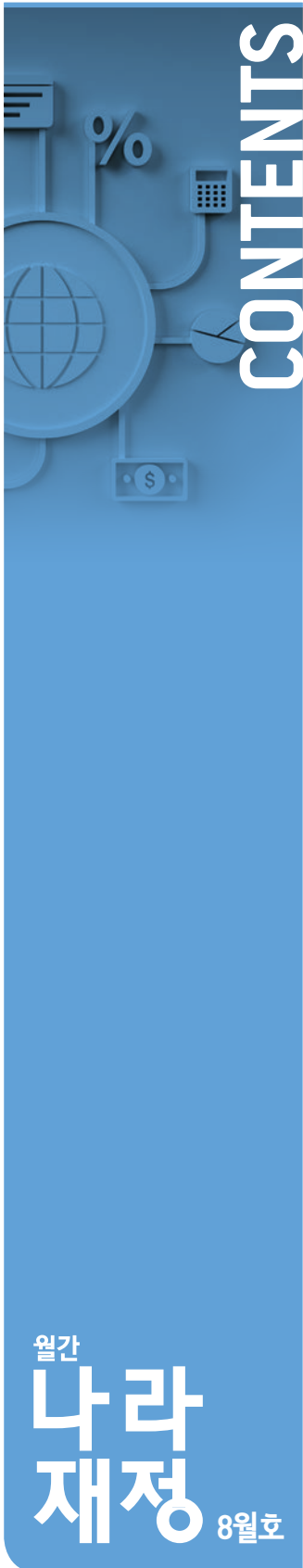


Global Finance Platform Builder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Vol.08 / August. 2017

기획 특집 06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성과와 추진방향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재정 논란 14

예산의 범위 및 구분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재정이슈포커스 20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성과와 정책 방향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예산성과 우수사례 30

법과학 분석 기법의 자체적 개발을 통한

신속한 첨단 범죄 대응 및 예산 절감 실현

김홍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연구사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36

나라재정 배움터 42

국가재정과 정부 기능

해외 재정 동향 50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56

MONTHLY

기획 특집 SPECIAL

기획 특집은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정책 방향 및 사업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06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성과와 추진방향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nansook@korea.kr

SPECIAL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성과와 추진방향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nansook@korea.kr

여성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 15조에
달할것으로 추산 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소비절벽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17년, 매일경제·롤랜드버거, 제2한국보고서).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여성고용률은 5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30대 여성 상당수가 여전히 결혼·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 201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약 190만 명이며, 이 중 30대 비율이 무려 약 101만 명에 이른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면 경력단절 기간이 장기화되어(평균 8.4년) 좋은 일자리로 재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2016년 경력단절여성 경제 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임금(소득)은 146.3만 원으로 경력단절 이전(173.1만 원)보다 월 26.8만 원이 감소했다.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유무에 따른 임금(소득) 차이는 월 평균 76.3만 원에 이른다.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개인, 기업, 정부 측면의 비용을 합산한 사회적 비용은 연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2014, 국회예산정책처).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2009년부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해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화된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연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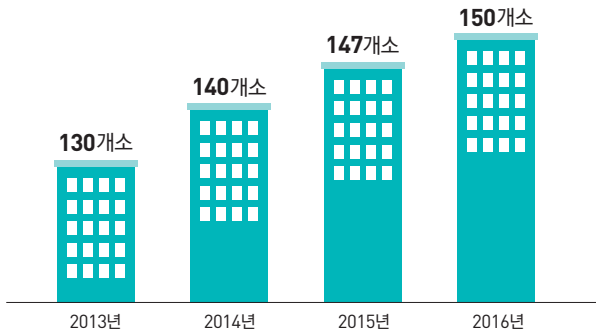
1.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정책의 추진 성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일센터는 2009년 72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확대되어 2016년말 기준 150개소가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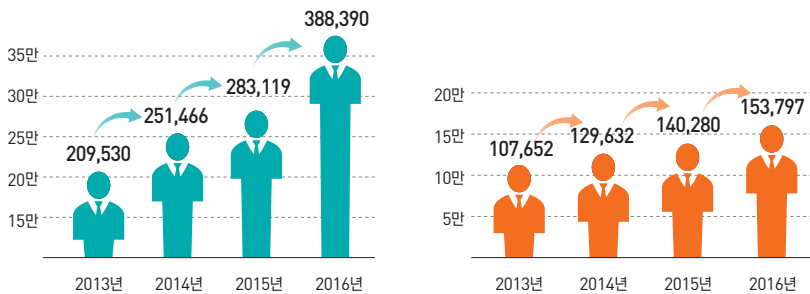
그림 1. 새일센터 연도별 현황



그동안 새일센터 확충 및 직업교육훈련 확대 등 경력단절여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이용자와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새일센터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한 여성은 38만여 명, 취업한 여성은 15만여 명이었다. 새일센터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여성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
으로 취업자 증가

그림 2. 연도별 새일센터 구직자 및 취업자 현황



【 2013~2016 연도별 구직자(명) 】

【 2013~2016 연도별 취업자(명) 】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새일센터의 직업 교육훈련은 2009년 184개 과정에서 점차 확대되어 2016년에는 690개 과정이 운영되었다. 직업교육훈련은 지역산업과 구인 수요 등을 반영해 기업 맞춤형, 전문기술과정, 창업과정,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과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2016년에는 IT, 콘텐츠, 디자인, 문화·예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에 경력단절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신규 도입하여 25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장기간의 훈련과정 운영, 실비 기준 훈련비 지원, 강사료 별도 단가 적용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품질을 높였다. 그 결과, 교육훈련생들이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 웹&모바일 앱 디자인 전문가 과정, 슈즈디자이너 과정, 텍스타일 디자이너 과정, 3D 프린터를 활용한 디지털공방 창업과정, HACCP식품 QC 과정 등

고부가가치 직종에 경력
단절여성이 진출할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규도입하여 우수한
성과창출

공모전 수상 사례

- 슈즈디자이너 양성과정 훈련생이 '2016년 수제화 해커톤 프로그램, 깃스 온 슈즈'에 참가하여 3D 프린터로 출력한, 굽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웨딩슈즈로 우수상 수상
- 문화기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과정의 훈련생이 '서울여성공예창업소전'에 참여하여 입선
 - * 향후 새일센터에서 베품시장(플리마켓) 참여 및 상표권 등록 관련 변리사 컨설팅 지원, 창업 상담, 서울여성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연계 및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
- 텍스타일 디자이너 훈련생 '2016 바른손카드 디자인 공모전'에서 2등상 수상
 - * 수상자는 디자인 카드 판매 수익금의 5%를 받음

새일여성인턴 지원으로 직장 적응력 강화

새일센터는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던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한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새일여성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제도는 새일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3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였을 때 기업체와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을 지급하

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에는 여성 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사전에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 연계 시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하도록 하여 이들의 고용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제도는 최근 4년간(2013~2016년) 인턴십을 지원받은 여성은 결혼이민여성 인턴을 포함하여 총 27,783명이고, 매년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93%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후관리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효과성 제고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한 후 계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용기업의 일·생활 균형 환경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이 근무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여성 화장실·수유실 등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최대 5백만 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아울러, 어렵게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화, 문자, 취업현장 방문 등을 실시해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취업자 간담회, 교육 등을 연중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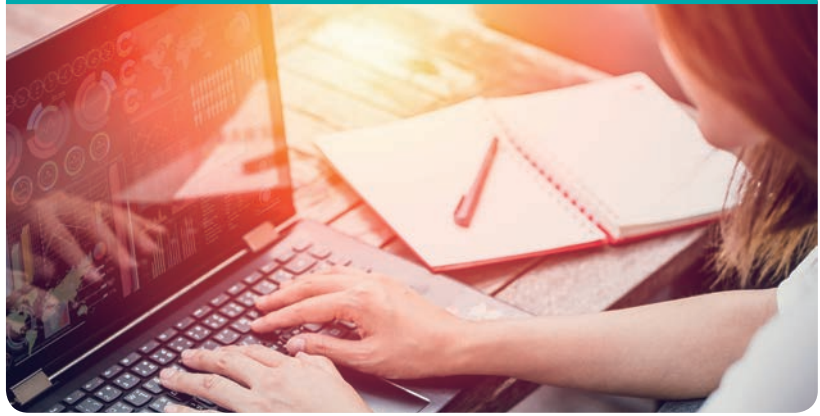
최근 4년간(2013~2016년) 전국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취업여성의 수는 115만여 명이며, 6천 8백여 개의 기업에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기업환경개선을 지원하였다.

기업에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기업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후 사후관리 지원

2. 2017년 추진방향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

여성가족부는 2016년 도입한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훈련과정을 2017년에 25개에서 36개로 확대했다. 4차 산업에 대비해 SW교육전문가, SW융합과정, 바이오 과정 등 훈련과정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직업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구인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지역별 산업 현황 등을 반영한 기업맞춤형, 전문기술형 직업교육훈련도 확대한다.

또한,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대한법무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주요 협회와 협업해 구인수요를 파악하고 틈새 직종을 발굴하여 기업맞춤형 교육훈련 및 취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한국지식재산전략원(지식재산 전략 전문가 양성 과정), 한국세무사회(세무사무원 양성 과정), 대한법무사회(법무사무원 양성 과정) 등

그 밖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수료 후 '새일인턴'으로 우선적으로 연계하거나 교육과정 중 현장 실습 비중을 확대하고 직장 내 훈련비용을 별도로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창업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활동 강화 됨

여성 창업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2017년에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 창업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 활동이 보다 강화된다.

증가하는 여성 창업 수요에 맞춰 새일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초기 단계 여성의 사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를 배치하여 지역 내 유망창업 업종 발굴, 정보제공, 교육훈련, 멘토링 등 창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술, 자금, 특허 등 전문컨설팅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경력단절 예방 지원도 강화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일센터 구직등록 여성, 그리고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여성친화 일촌기업에 근로 중인 여성 등 대상

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무상담, 직장적응(복귀)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여성이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컨설팅도 실시된다. 특히, 시·도별로 새일센터,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일자리 유관기관,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경력단절예방 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역 내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창업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경력단절여성이 취·창업 지원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2017년 하반기에 새일센터가 5개소 추가 설치(150 → 155개소)되고, 고용과 복지, 금융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와 새일센터의 협업도 강화된다.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꿈날개, www.dream.go.kr)를 통해 새일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경력개발 코칭, 이력서 및 일대일 면접 컨설팅 등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지속적인 훈련과정
확대 필요**

3. 맺음말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 관련 양적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 그리고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경력단절’은 여성 고용의 가장 큰 이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극 발굴되고, 산업, 고용 환경 변화에 맞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직종 분야의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학력 여성은 출산·육아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 노동시장 재진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한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력이 단절됐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MONTHLY

재정 논단 OPINION

재정 논단은 정보와 정책 진단 및 제언 등
재정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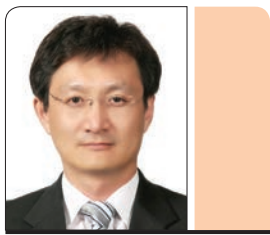
PUBLIC FINANCE INFORMATION

14 / 예산의 범위 및 구분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kbpark@uos.ac.kr

OPINION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kbpark@uos.ac.kr

혼란스러운 재정 용어의
사용은 재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 높음

예산의 범위 및 구분

1. 혼란스러운 재정 관련 용어

최근 정부의 살림살이는 대규모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규모 적자라는 사실은 2010년에 약 13.0조 원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무려 39.0조 원에 달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의 숫자가 알려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반적인 재정수지가 아니라 ‘관리’재정수지라는 점이다. 이렇듯 재정과 관련한 다수의 용어는 예산 또는 재정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과 관련된 용어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와 분류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제54조 제1항). 그리고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헌법에서 말하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불분명하다. 국가재정법 제1조에서는 국가재정법을 만드는 목적이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은 예산·기금·성과관리·채무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며, 예산과 기금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재정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5조에서 기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말하는 예산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금도 정부 예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산, 기금, 총지출, 통합재정 등 너무 많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재정 용어의 사용은 재정에 대



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잘못된 정책 판단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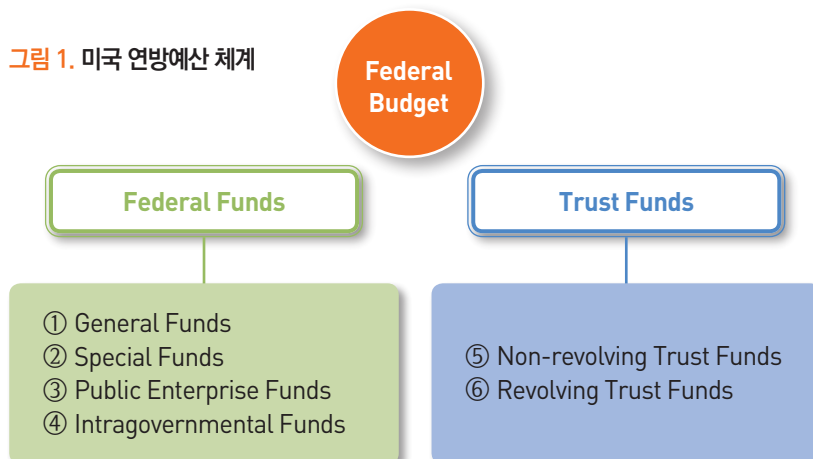
2. 통합재정과 관리재정

미국은 예산과 기금을
구별하지 않음

① 미국 사례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연방정부의 예산은 1969년부터 회계(fund type)의 구분이 없는 통합예산으로 작성된다. 이러한 통합예산은 약 1,600개의 지출항목(Spending Accounts)으로 구성된다. 미국도 예산(Federal funds)과 다수의 기금(Trust funds)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예산과 기금을 구별하지는 않는다.

그림 1. 미국 연방예산 체계



그리고 연방정부의 통합예산은 법률에 따라 합산예산(on-budget)과 합산제외예산(off-budget)으로 구분하고 있다. 합산제외예산이란 정부가 소유·통제하는 기관의 예산이지만 법률에 따라 예산 합계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합산제외예산 항목으로는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우체국자금(Postal Service Fund), 금융기관 구조조정 예산(전체 5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만 예산회계로 계산함), 전략석유 비축예산(일시적으로 사용, 이후에 예산으로 전환) 등이 있었다. 합산제외예산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재정적자의 목표치 또는 지출 통제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②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재정적자에 대한 다른 법적 기준은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국가의 회계이므로 법률로만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지가 예산의 '수지'가 된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7조와 제9조에서는 통합재정 '수지'를 계산하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사용하는 재정수지의 기준은 통합재정이 되고 있지만 통합재정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다.

한국정부가 사용하는
재정수지 기준은
통합재정이지만 법적인
규정이 없음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이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하나로 통합하여 파악하는 회계방식을 말한다. 2016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19개 및 기금 67개가 모두 통합재정에 포함된다.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외의 항목도 통합재정에 포함될 수 있다. 국제통화기구(IMF)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통합재정을 만들기 위한 재정통계 개편 작업은 이미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국가재정법이나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니다.

재정의 분류에 있어서 논쟁이 되는 다른 하나는 관리재정수지다. 정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서 관리재정수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의 수지보다는 관리재정수지를 정부의 재정수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리재정수지라는 명칭을 국가재정법에서 찾을 수는 없다. 현재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통합재정의 수지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재정적자도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하여 관리재정수지를 계산하였다. 실제 재정적자가 아닌 채무 조정용 일시적 대규모 재정적자나 실질적인 재정흑자로 볼 수 없는 사회보장기금의 흑자는 제외하여야 재정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으므로 관리재정수지는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합산예산(on-budget)의 개념과 사실상 동일하다.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는
매우 유용한 개념

3. 제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재정과 관련된 용어를 법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인 근거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를 법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의 회계(더 정확히는 예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 기준으로 한다’라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통합재정이 반드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통합재정일 필요도 없다.

예산과 기금을 통합하면 국가재정법이 단순화되고, 재정에 대한 이해도 및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기금과 회계를 통합하였으므로 기금이 예산과 달라서 통합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미국의 사



재정용어에 대한 법적인 근거 필요

례에서 보듯이 통합예산에 기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통합재정의 범위를 법률에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미국처럼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의 추경예산에서 보듯이 법률 규정이 너무 구체적이고, 제약적이면 불필요한 논쟁을 격화시키기 때문이다.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미국처럼 소관부처가 판단하도록 하였다면 국회의 논쟁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관리재정수지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리재정의 범위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이외에 양곡, 조달, 우정사업 등 공기업회계를 통합재정수지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처럼 사회보장기금만 제외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외환위기에 이후에 공적자금 상환용 재정적자를 제외하였듯이 필요하다면 사회보장기금 이외의 항목도 관리재정수지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수지의 목적이 재정 운영으로 발생한 수지를 보는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재정과 마찬가지로 관리재정의 범위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정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적자금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정 활동에 예외성이 있으므로 법률 규정에 예외적인 항목을 모두 나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리재정수지의 장점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채무를 관리재정의 범위에서 제외할 때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평형기금의 목적이 외환의 수급조절이다. 따라서 재정 활동이 아닌 금융 활동으로 보아 통합재정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정부가 그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이기 때문에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통합재정에서는 재정수지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국가채무에는 포함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외국환평형기금은 행정부에서 독립적인 기관에서 운영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므로 행정부에 속한다. 따라서 외국환평형기금은 통합재정에 포함되고, 해당 채무는 국가채무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채무를 구분하고 있다. 금융성채무에는 주택과 관련된 채무도 있지만 핵심적인 금융성채무는 외국환평형채권이다. 2016년 전망 기준으로 외국환평형채권의 채무는 210.3조 원, 서민주거 안정용 등 여타 금융성 채무는 59.5조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현재의 재정 운영 방식에 부합하게 하려면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합재정에 포함하되 관리재정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된다. 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구분되듯이, 같은 기준으로 통합재정채무와 관리재정채무로 구분하면 된다.

**각 재정의 범위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정하도록 법률에서 규정**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mkim@kpfis.kr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예산낭비 방지,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
가능 수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성과와 정책 방향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전적 타당성 검증 제도다. 이는 대규모 재정사업 시행 전에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보다 경제성이 있는 재정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을 하는 데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국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표 1〉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추진 경과

연도	주요 추진 경위
1998년	-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 구성(기획예산위원회, 건설교통부)
1999년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수립(건설교통부) - 1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24개 사업) - 5월, 예산회계법령 시행령 제9조 2 예비타당성조사 법제화
2000년	-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분석 시범 도입
2001년	- 예비타당성조사에 AHP 분석 본격 도입
2004년	- 정보화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시범사업 착수(3개 사업)
2007년	-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연구개발사업, 정보화사업) - 국가재정법(제38조 4) 및 동법 시행령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의 법정 제도화
2008년	-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비용 사전심사제) 도입
2010년	- 예비타당성 범위 확대(기타 비투자 재정부문사업)
2012년	- 복지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검증 강화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의무화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도입 -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사업' → '기타 재정사업'으로 통칭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17), p. 12, 〈표 II-2〉 저자 일부 수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면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¹⁾가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²⁾이다.

또한, 중기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의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 해당된다. 대상사업은 ①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② 사업계획의 구체성, ③ 사업추진의 시급성, ④ 국고 지원의 요건, ⑤ 지역균형발전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고, 차년도 상반기 중에 조사를 시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대상 규모의 사업이더라도, 공공청사, 국방관련, 법정시설, 재난예방·복구 사업 등은 사업진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500억 원)에 미달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012년 도입)를 통해 B/C 분석을 제외한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라도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관리하지 못했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은 ①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 ②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 ③ 여건변화로 수요예측치가 예상보다 30% 이상 감소한 사업 등이다. 타당성재조사는 부처에서 사업개시 후 사업비 증액으로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타당성재조사를 통한 제도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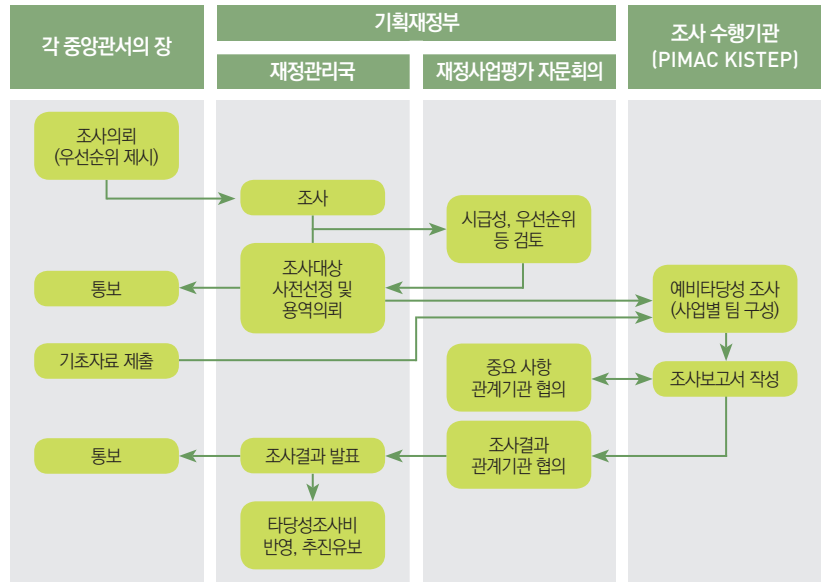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체계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주관 하에 진행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 수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조사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조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가 수행하고 있다.

1) 총사업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모든 금액을 합한 것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2) 정보화사업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그림 1.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체계



자료 : pimac.kdi.re.kr, 2017. 7. 31. 저자 일부 수정

영국은 관문심사제도를
통해 사업 전 주기에
걸쳐 타당성조사 수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해외 사례

미국, 영국,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미국과 영국은 Top-down 예산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업부처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도 사업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전평가조사의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신청한다. 우리나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의 차이점은 국가마다 다른데, 미국은 부처 자체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반면, 재정당국은 방법론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를 통해 사업 시행 전, 시행 중, 시행 후 전주기에 걸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일본 재정당국의 역할은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계획의 향후 추진여부에서 부터 적정 사업시기, 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향후 대안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는 ① 경제성 분석, ② 정책

성 분석, ③ 지역균형발전 분석(또는 기술성 분석)을 총괄적으로 분석한다.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건설사업은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수행하고, 정보화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기술성 분석(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진행한다.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만을 대상으로 한다.

〈표 2〉 사업 유형별 분석 평가항목

사업 유형	평가항목
건설사업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기술성 분석(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
기타 재정사업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과정으로, 사업 특성에 따른 수요, 편익, 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방법을 채택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사업비로 지출되는 각종 비용과 사업을 통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각종 편익을 현재가치로 산출하고, 이를 활용해 평가지표를 작성해 분석한다. 주로 B/C 비율(Benefit-Cost ratio)과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경제성 분석은 B/C 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³⁾을 확보한다고 보며, 편익이 비계량적인 사업의 경우, 비용-효과분석을 한다.

정책성 분석은 대상사업의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분석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관련 정책과 일관성, 사업 준비, 추진상의 위협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자원조달 가능성, 상위 계획과의 일치성, 환경성 평가 등이다. 민간투자자로 추진(자원조달 가능성 측면)하거나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무성 분석⁴⁾을 함께 수행하기도 한다.

**비용편익분석 결과 B/C
비율이 1이상인 사업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

3) 순현재가치가 0 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B/C 비율이 1보다 크면 순현재가치도 0 보다 크게 도출된다. 내부수익률은 자본 조달 비용(일반적으로 이자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4) 재무성분석은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재무적 관점에서의 타당성 평가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 상태를 방지하여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한다. 지역 간 산업연관표(IRIO)를 이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고, 지역낙후도의 개선 수준을 분석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기술성 분석은 정보화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수행하며, 대상사업의 기술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주로 분석한다.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성공 가능성, 기존 기술 또는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분석하여 평가한다.

AHP 종합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핵심은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기술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때 활용하는 방법이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불리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이다. AHP 기법은 설문을 통해 평가 항목별 가중치⁵⁾와 계량화된 지표값을 도출하여 하나의 사업타당성 지표를 도출하는 방법이다.⁶⁾

AHP 설문은 ① 평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설정과 ② 평가항목별 사업시행/미시행 대안의 선호도 측정으로 구성하고 있다. 계층별 평가항목을 예시로 보이면 [그림 2]와 같다.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경우 계량지표이기는 하지만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준점수로 만든 다음 종합평가에 반영한다. 정책성 분석과 기술성 분석은 정성적 평가이므로 평가항목 간 쌍대비교를 통한 9점 척도를 채택하여 응답하고, 그 결과를 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설문 결과를 통해 항목별 가중치와 평가항목 간 상대적 선호도를 반영하여 종합평점을 도출한다. 사업시행의 AHP 종합점수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AHP 평가 항목 가중치를 어떤 항목에 얼마나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은 지속적인 쟁점 사안이다. 이에 AHP 설문

AHP 종합점수가 0.5 이상인 사업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5)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쌍대비교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로 결정된다. 설문단계에서 응답하는 가중치는 (표 3)의 항목별 가중치 범위 안에서 응답하도록 설정한다.

6) 자세한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기법은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를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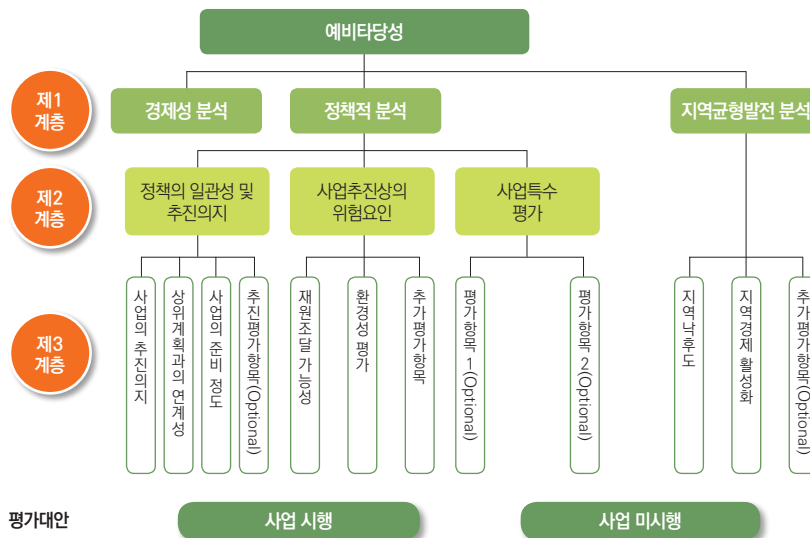
응답자에게 사업 유형별 분석 항목에 가중치 상·하한을 두어, 분석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자의적 판단)를 줄이고 있다.

〈표 3〉 AHP 평가 항목별 가중치

사업유형		경제성	정책적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건설사업		40~50	20~35	25~30	-
국가연구개발사업		30~40	20~30	-	40~50
정보화 사업	B/C 분석 시	40~50	20~30		30~40
	E/C 분석 시	30~40	20~30		40~50
기타 재정사업	B/C 분석 시	25~50	50~75		
	E/C 분석 시	20~40	60~80		

※주 : B/C는 비용편익분석을 의미하며, E/C는 비용효과분석을 의미함.

그림 2.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내용 및 종합평가 AHP 구조



AHP 종합평가는
분석 계층별 접근으로
사업을 평가

※ 주 :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를 예시로 제시함.

자료 : 김재형(2011), p. 16, [그림 5].

3. 예비타당성조사 현황과 성과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예비타당성조사의 최근 진행 상황을 보면, 2013년 25건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4년 44건, 2015년 34건, 2016년 39건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다. 2017년 6월까지 14건을 완료하였다.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은 66.7%다. 총사업비의 규모는 11조 4,098억 원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총사업비를 예산 절감액으로 보면, 2016년은 6조 552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전체 조사대상 총사업비의 34.7%에 달한다. 한국개발연구원(2017)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총사업비 절감액을 130.7조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4년 총 사업비 규모가 큰 이유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있었고, 2016년에는 주요 조사사업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업, 춘천~속초철도 건설,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표 4〉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현황 및 실적

(단위: 건, 억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6월)
통과	건수(A)	16	35	25	26	7
	총사업비 계(B)	44,451	189,795	51,598	114,098	66,729
미통과	건수(C)	9	9	9	13	7
	총사업비 계(D)	35,023	40,711	33,880	60,552	57,482
합계	건수(E)	25	44	34	39	14
	총사업비 계(F)	79,474	230,506	85,478	174,650	124,211
통과율(A/E)		64.0	79.5	73.5	66.7	50.0
미통과 총사업비 비율(D/F)		44.1	17.7	39.6	34.7	46.3

※주: 위 자료는 저자가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2013~2015년 총사업비 합계는 실제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월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예산편성 과정이라는 인식 정착 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성과

예산편성과 집행 등 정부 재정운용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예산편성의 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 또한, 경제성이 없는 사업추진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부처에서는 조사를 의뢰하기 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자체 심의를 먼저 거치고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부처 스스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선제적 기능도 한다. 김강수(2014)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이후 도로사업과 도시철도 사업 수요 과다 예측 오차가 줄어 '예산지킴이(gate keeping)'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평가한다.

대상사업 선정과정과 자문을 하는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 사업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검토회의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시켜 예산당국과 사업부처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줄여가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상사업의 선정, 조사 연구진의 구성과 연구수행을 위한 사업 유형별 표준분석지침을 개발하는 등 조사 수행 과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⁷⁾ 이러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은 예산 집행에서 사업부처와 예산당국의 공적 조사과정(public inquiry process)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4.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 방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조정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고 18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조사대상 기준은 그대로이다. 물가 수준 등 경제규모가 제도 도입 당시보다 2배 정도 확대된 상황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모두 연구하는 것은 예산과 시간, 조사 수행인력 등의 한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방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 상향관련 취지로 국회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여타 사업에 비해 사업규모가 커서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부처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SOC 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대상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2017)은 SOC 대상사업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 요구

7) 2014년부터는 「국가재정법」(2014. 1. 1. 시행) 개정 이후 예비타당성 대상규모 및 면제요건을 법률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하였다.

〈표 5〉 분야별 예타 신청 건수 및 사업 규모('05년~'14년 상반기)

		총계	SOC	건축	R&D	정보화	기타 재정
사업 건수	건수	1,267	682	298	216	30	41
	비중(%)	(100)	(53.8)	(23.5)	(17.0)	(2.4)	(3.2)
사업 금액	조 원	539.5	328.2	53.0	130.2	8.2	19.9
	비중(%)	(100)	(60.8)	(9.8)	(24.2)	(1.5)	(3.7)

자료 : 기획재정부(2014).

재원배분을 위한 사업간 비교 판단 체계 보완

재정사업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제약하에 진행 가능한 사업이 한정되어 있을 때, 우선순위를 B/C 비율이 높은 사업에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B/C 비율은 해당사업에 대해서만 경제성을 판단 가능하며, 비교 사업간 B/C 비율의 높고 낮음으로 경제성을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표 6〉과 같이 AHP 종합평가 결과 시행 가능한 두 사업을 비교한다고 가정하면, B/C 비율이 더 높은 A사업보다 순편익이 더 큰 B사업을 택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순편익이 더 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순현재가치(NPV) 등 다양한 보조지표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제시할 수 있다.

예산 제약하에서 사업간 비교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활용 제고

〈표 6〉 재정사업 비교 예시

구분	총사업비	B/C 비율	총편익	순편익(NPV)
A사업	500	1.5	750	250
B사업	2,000	1.4	2,800	800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보완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보완에 대한 연구는 양승우 외(2015), 김재환(2016), 김재형(2011) 등 다수 존재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첫째, 지역 간 격차 문제를 고려해 지역균형발전 분석 AHP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조치⁸⁾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기획재정부(2017) 제도개편안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고려해 정책성 분석 가중치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한 폭을 각각 5%p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편으로 낙후 지역을 고려하는 지역낙후도 지수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연(2013)

연구와 같은 시도는 지역낙후도 지수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제시하고 있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관광사업 등에서 사업을 통한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등을 활용하는데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제안한다. 사회적 할인율⁹⁾ 등 주요 계수(parameter)는 경제성 분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계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후 5.5%를 유지하고 있던 사회적 할인율을 10년 동안 금리가 하락한 저금리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4.5%로 1%p 하향 조정하는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8) 2017년 7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9) 예를 들어, 사회적 할인율은 현재가치를 결정하는 계수로 사회적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면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할인율이 너무 낮으면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 현재는 5.5%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 방법론 보완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기능 강화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201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안)”, 보도자료, 2014. 10. 22.
- 기획재정부(2017a),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기획재정부(2017b), “경제 및 재정 여건변화 등에 부합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보도자료, 2017.8.14.
- 김강수(2014),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성과와 과제”, 『국토』 413호, 국토연구원 2016. 3.
- 김재형(201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쟁점”, 『제1차 월례 workshop 발표자료』,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 이종연(2013), 『지역낙후도지수 개선방안』, 정책연구시리즈 2013-10,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2012), 『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한국개발연구원(2017), 『2016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황지호·강현규·임성민·전세림·임지영·최이중(2014),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김재환(2016),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21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 10. 21.
- 양승우·이민형·이명하·권보경(2015),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 재정법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5-0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각 월호.



김홍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연구사
naivelad@korea.kr

법과학 분석 기법의 자체적 개발을 통한 신속한 첨단 범죄 대응 및 예산 절감 실현

• 시간 : 2017년 7월 27일 오전 11시

• 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는 말은 이제 철 지난 옛 표현이 되었다. 최근 법과학적 분석기법을 토대로 한 감정 기법의 발달로 심증은 없더라도 강력한 물증이 각종 사건·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학이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및 사법적 판단에 도움을 주는 학문을 총칭하는 용어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과학 분석 기법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첨단 범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던 값비싼 외산 장비를 대체하여 예산을 크게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2017년 상반기 예산성과금 대상을 받았다. 원주에 위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김홍석 연구사를 만나 최근 개발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았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문서연구실 김홍석 연구사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각급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 필적, 인영, 문서위변조 여부 등 문서와 관련된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새로운 감정기법이나 장비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Q 현대 범죄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과학적 기법으로 진실을 밝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사님이 속한 '디지털분석과'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A. 디지털분석과는 휴대폰, 하드디스크,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 각종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복원, 복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CCTV를 비롯한 사진, 비디오 등 각종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영상 및 음성의 복원, 판독, 위·변조 여부 확인 및 얼굴, 신장, 음성 등 생체인식 데이터를 통한 동일인 여부 판

【 인터뷰 】

김도일 연구원
doylek@kpfis.kr



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필적 및 인영의 동일성 여부와 문서의 위·변조 확인, 위조지폐 분석, 문화재 및 미술품의 진위 여부 확인도 업무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최근 디지털분석과는 법과학적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값비싼 외산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개발된 기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법과학적 분석을 위해 사용해 온 기존 외산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공급 업체가 적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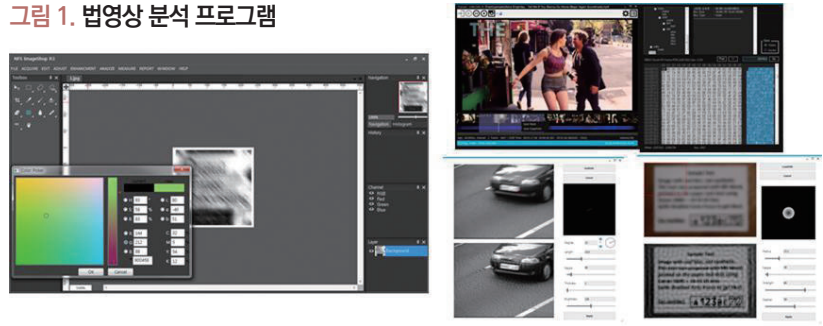
개발된 기술 중 가장 실용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법영상 분석 프로그램’, ‘인영분석 프로그램’, ‘위조지폐 자동 판별장치’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법영상 분석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포토샵과 비슷한 기능의 프로그램으로, CCTV 영상의 화질 개선, 번호판 판독, 차종 분석, 위·변조 여부 분석 감정에 적용되어 연간 수천 건의 의뢰를 처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자동차의 흐릿한 번호판이 찍힌 저화질 이미지를 여러 장으로 겹쳐서 고화질로 바꾼다든지, 틀어진 이미지의 각도를 바꿔

**법영상 분석 프로그램은
CCTV 영상의 화질개선,
번호판 판독, 차종분석,
위변조 여부 분석 등
감정에 적용**

복원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물로부터 증거로 쓸 만한 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림 1. 법영상 분석 프로그램



인영분석 프로그램은
각종 경제 범죄에
악용되는 도장의 위조
여부를 판별하는데 사용

둘째, ‘인영분석 프로그램’은 각종 경제 범죄에 악용되는 도장의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기준 생성 및 자동 비교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차용증에 날인된 인감 등의 동일성 여부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이는 대체할 만한 해외기술이 없는, 우리만의 완성도 높은 기술로서 중국, 일본 등 도장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연간 도장감정 의뢰가 수백 건 들어오는데, 과거에는 OHP(overhead projector) 필름에 출력하여 겹쳐 보거나 포토샵 기능을 사용해 판별했지만 현재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소요 시간은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그림 2. 인영분석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위조지폐 자동 판별 장치’는 핸드폰 등에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는 모바일 장치와 최신 기술인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기술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위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 간 위조화폐의 적발 건수는 2만 건 이상으로, 향후 경찰청 등 일선 수사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수사 및 공공업무 목적으로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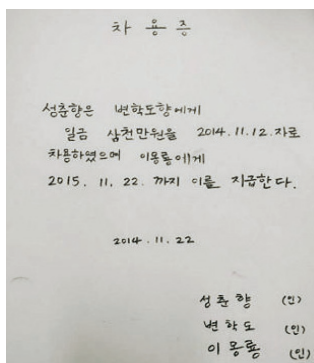
그림 3. 위조지폐 자동 판별 장치와 진폐 촬영 이미지



위조지폐 자동 판별
장치는 위폐 및 문서의
위조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유용하게 사용

위조지폐 자동 판별 장치로는 비단 위폐뿐만 아니라 문서의 위조여부도 판별할 수 있는데요, 이 차용증을 한 번 보시죠(그림 4 참조).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아마 육안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하실 테지만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인 ‘삼천만 원’은 원본의 ‘사천만 원’이 가펄을 통해 변조된 글씨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장치를 이용하여 잉크나 종이 등의 동일성 여부를 분석하면 문서와 관련된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위조지폐 자동 판별 장치를 통한 문서 진위 여부 판별 예



〈위조 이전〉
특수광 사진



〈위조 이후〉
일반광 사진

Q 기억에 남는 감정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인감 등이 관련된 사건은 사기사건 등 경제 범죄가 관련이 많아 피해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에 인감 위조로 500억 원 규모의 토지 가로채기를 시도한 사건을 인영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감정으로 해결한 것은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과수 하면 부검 등과 같은 강력 사건과 관련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는 좀 더 생활에 밀접한 범죄사건 해결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5. 인영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건 해결 사례

2015년 인감 위조로
500억 원 규모의
토지 가로채기를 시도한
사건을 인영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감정으로 해결



Q 자체 기술개발에 따른 비용절감 등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비슷한 기능을 하는 수입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경우를 가정하면, 5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만큼의 직접적인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청 등의 유관 기관에 보급을 추진하고 있기에 보급 시 해당기관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및 신속한 해결 등의 무형의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과테말라나 스리랑카 등에



각종 ODA(공적원조) 사업을 통한 보급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위선양 및 외화 획득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Q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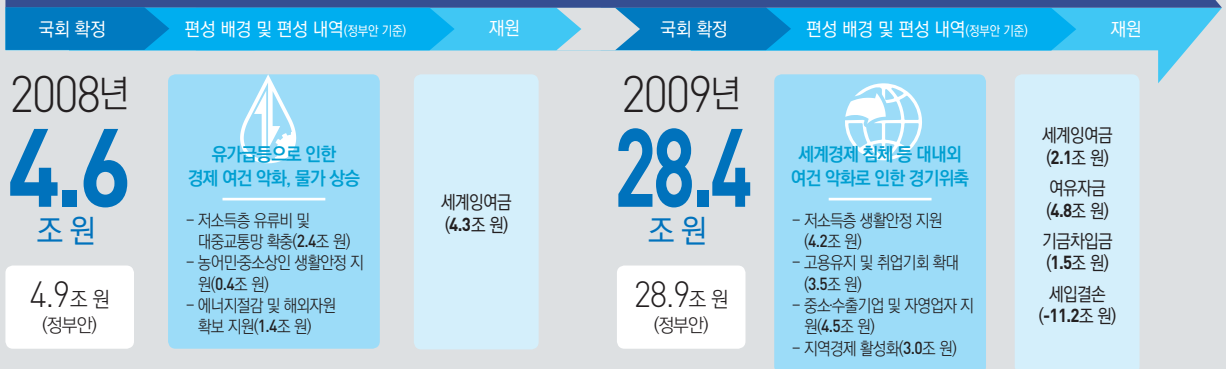
A.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법과학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성원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 최고의 법과학 기술 보유 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체 기술개발로
예산 절감과 범죄 예방
및 신속한 해결 등
무형의 파급효과 기대**



2017년 추가경정예산 알.아.보.기

추경 규모 및 편성 내역(2008~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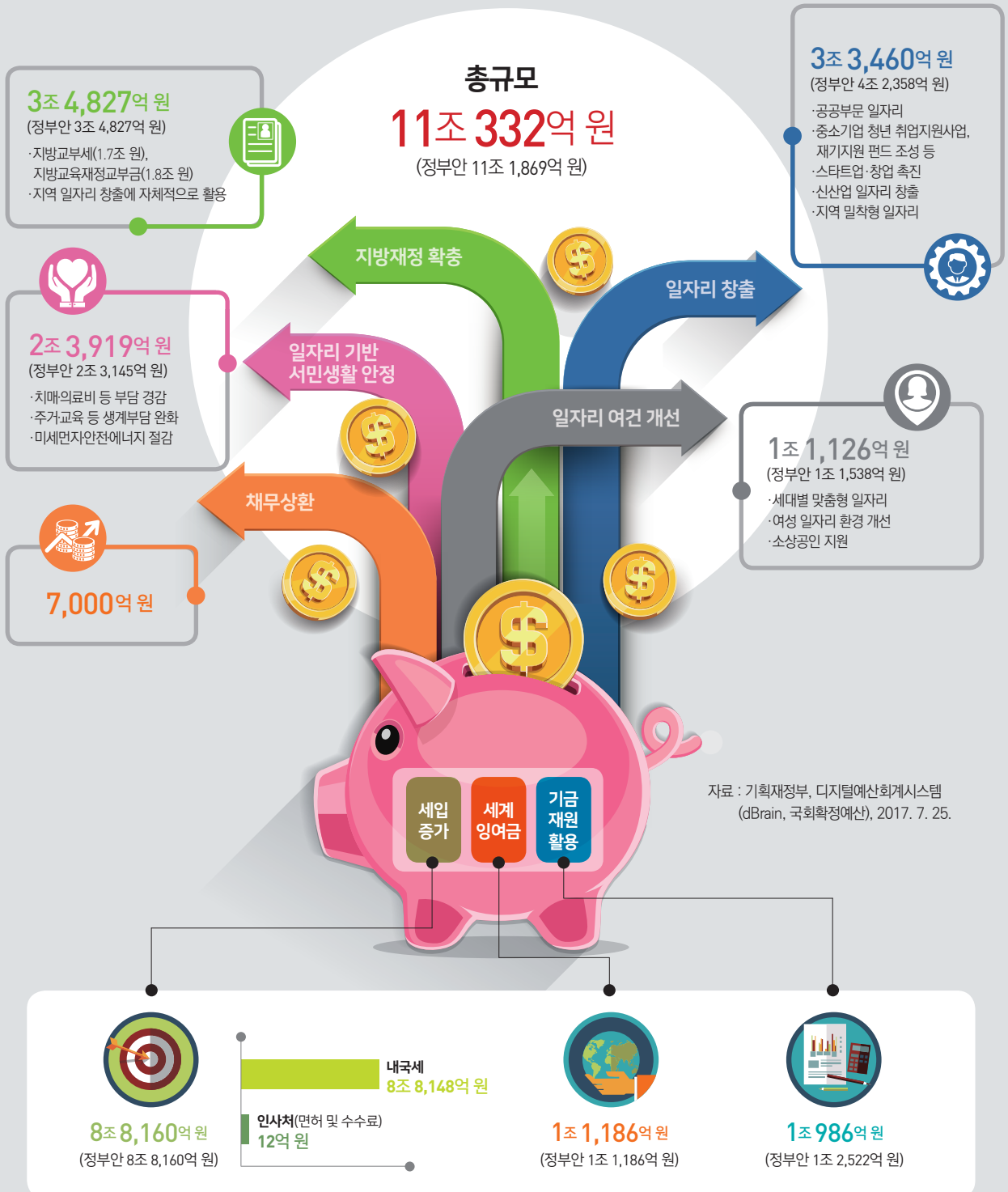
추경 규모 및 편성 내역(2013~2015년)



추경 규모 및 편성 내역(2016~2017년)



2017년 추경 주요 사업과 재원조달 방안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1.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친 용어¹⁾로 이미 확정된 본예산에 추가나 변경을 가한 예산을 말한다.

정부는 「헌법」 제56조와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의한 법적 요건 하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추경예산 편성의 법적 요건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다. 2007년 「국가재정법」에 법문화된 이후 총 6번의 추경이 있었다.

추경예산이란 본예산에
추가(추가예산)나
변경(경정예산)을
가한 예산

〈표 1〉 추가경정예산 추이와 주요 배경

연도	규모	주요 배경
2008	4.6조 원	(경기침체)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국민소득 증가 둔화
2009	28.4조 원	(경기침체)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 부진 및 내수 침체
2013	17.3조 원	(경기침체) 저성장으로 경제 어려움 가중
2015	11.6조 원	(자연재해, 경기침체) 메르스 및 가뭄으로 경기 침체 우려
2016	11.0조 원	(경기침체, 대량실업) 청년층 및 조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 증가 예상
2017	11.0조 원	(경기침체) 고용시장 침체 및 분배지표 악화 등에 대응

2.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과

【작성】

김명규 부연구위원
mkim@kpfis.kr

김상기 연구원
sgkim@kpfis.kr

조현희 연구원
hyunheecho@kpfis.kr

정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시장 침체 및 분배지표의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6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어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추경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7월 16일 회부한 뒤, 7월 22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

2017년 추가경정예산은 총 11조 332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및 스타트업·창업 촉진²⁾ 등 일자리 창출에 3조 3,460억 원,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 1,126억 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 3,919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거·교육 등 생계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사업 등을 국정방향에 담았다.

추경예산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내국세 등 세입증가로 8조 8,160억 원, 세계잉여금으로 1조 1,186억 원, 기금재원활용으로 1조 986억 원 확보 가능하여 추가적인 국가채권 발행 없이 추경예산 지출을 충당할 계획이다.

〈표 2〉 2017년 추경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

(단위: 억 원)

구분	'17년 추경 규모		증감
	정부안	국회 확정	
총규모	111,869	110,332	△1,537
세출확대	111,869	103,332	△8,537
일자리 창출	42,358	33,460	△8,898
일자리 여건 개선	11,538	11,126	△411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3,145	23,919	773
지방재정 보강	34,827	34,827	-
채무상환	-	7,000	7,000
재원조달	111,869	110,332	△1,537
세입증가	88,160	88,160	-
내국세	88,148	88,148	-
인사처(면허 및 수수료)	12	12	-
세계잉여금	11,186	11,186	-
기금재원활용	12,522	10,986	△1,537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국회확정예산), 2017. 7. 25.

2017년 추경예산
총 규모는
11조 332억 원

1) 구 재정법 제23조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별하였으나 현행법은 포괄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부른다. 추가예산이란 본예산을 증액한 예산으로서 본예산 편성 후 당초 예산에 추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경정예산이란 본예산 성립 후에 지출한도액 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하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명은 사업분류 체계에 있는 단위 사업명이다.

4.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자원배분 변화

총지출³⁾ 기준으로 2017년 추경예산 편성액은 9조 5,561억 원 수준이다.

2017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분야별 예산 변화를 보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조합 출자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조 7,675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사업을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에 2조 3,652억 원 증액하였다.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학 시설확충 및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1조 9,485억 원이 늘어났다.

〈표 3〉 2017년 분야별 추경예산 현황

(단위 : 조 원, %)

분야	본예산(A)	추경예산(B)	증감(B-A)	증감률(B-A)/A
총지출	400.5	410.1	9.56	2.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6.0	18.8	2.77	17.3
사회복지	119.1	121.5	2.37	2.0
교육	57.4	59.4	1.95	3.4
일반·지방행정	63.3	65.1	1.79	2.8
농림수산	19.6	19.8	0.18	0.9
환경	6.9	7.1	0.16	2.3
문화및관광	6.9	7.0	0.12	1.7
공공질서및안전	18.1	18.2	0.09	0.5
교통및물류	18.6	18.7	0.08	0.4
보건	10.4	10.4	0.04	0.4
과학기술	7.0	7.0	0.01	0.2
국토및지역개발	3.5	3.5	0.01	0.2
국방	39.0	39.0	0.00	0.0
통신	7.0	7.0	0.00	0.0
통일·외교	4.6	4.6	0.00	0.0
예비비	3.0	3.0	0.00	0.0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국회확정예산), 2017. 7. 25.

소관부처별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조합 출자와 소상공인 지원 융자사업 등을 소관하는 중소기업청의 증액 규모가 2조 6,48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국립대학 시설확충 및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소관하는 교육부가 1조 9,404억 원이었다. 또한,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을 하는 행정자치부는 1조 6,734억 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는 1조 2,465억 원을 증액하였다.

3) 월간 나라재정 2월호,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세계잉여금/총수입/총지출) 참조

총지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기금 간 내부거래 - 보전거래

'17년 추경예산 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조 7,675억 원으로
증액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

〈표 4〉 2017년 주요 부처별 추경예산 현황

(단위 : 조 원, %)

소관부처	본예산(A)	추가경정예산(B)	증감(B-A)	증감률(B-A)/A
중소기업청	8.2	10.8	2.65	32.3
교육부	61.6	63.6	1.94	3.1
행정자치부	41.5	43.2	1.67	4.0
국토교통부	41.3	42.6	1.25	3.0
보건복지부	57.7	58.5	0.87	1.5
고용노동부	18.3	18.6	0.36	2.0
환경부	6.7	6.8	0.16	2.4
문화체육관광부	5.7	5.8	0.12	2.1
산업통상자원부	7.2	7.3	0.12	1.6
농림축산식품부	14.5	14.6	0.12	0.8
금융위원회	0.2	0.3	0.08	32.2
국민안전처	3.3	3.4	0.06	1.8
산림청	2.0	2.1	0.05	2.5
법무부	3.3	3.3	0.05	1.4
미래창조과학부	14.3	14.3	0.02	0.2
경찰청	10.1	10.1	0.01	0.1
해양수산부	5.0	5.0	0.01	0.3
통계청	0.3	0.3	0.01	2.2
여성가족부	0.7	0.7	0.00	0.6
국가보훈처	4.9	4.9	0.00	0.0
특허청	0.4	0.4	0.00	0.3
농촌진흥청	0.9	0.9	0.00	0.1
병무청	0.2	0.2	0.00	0.1
식품의약품안전처	0.5	0.5	0.00	0.1

’17년 추경예산 중
중소기업청 소관이
2조 6,483억 원으로
증액 규모가 가장 큼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국회확정예산), 2017. 7. 25.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변화를 회계별로 보면, 신용보증 기관출연, 국립 대학 시설 확충 등의 사업이 포함된 일반회계는 5조 3,239억 원,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농업시설 개선) 등 특별회계는 3,303억 원 증액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모태조합 출자), 주택도시기금(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 지원 융자사업) 등 기금은 3조 9,019억 원 증가하였다.

〈표 5〉 2017년 회계별 추경예산 현황

(단위 : 조 원, %)

회계	본예산(A)	추가경정예산(B)	증감(B-A)	증감률(B-A)/A
총지출	400.5	410.1	9.56	2.4
일반회계	224.4	229.8	5.32	2.4
특별회계	50.2	50.6	0.33	0.7
기금	125.9	129.8	3.90	3.1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국회확정예산), 2017. 7. 25.

국가재정과 정부 기능

나라재정 8월호부터 「재정 배움터」가 신설되었다. 「재정 배움터」는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한 코너로 진행되며, 재정에서 다루어지는 제도와 개념, 용어, 현황 등을 제공한다.

재정은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과
지출 행위를 통칭

Q1 재정이 무엇인가요?

정부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치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넓은 의미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통칭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위 3부 기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지출을 하는데, 이를 재정지출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은 개인(가계)과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조세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금전적 수입과 지출 행위를 통칭하여 재정이라고 합니다.

Q2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2017년 예산을 통해 본 우리나라 정부 재정의 총지출 규모는 약 410조 원(추가경정예산)입니다. 총수입 규모는 414.3조 원¹⁾으로 전망됩니다.

Q3 정부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정부의 재정활동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 주체로 경제구조가 아주 단조로웠던 시대에는 그 기능이 그리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국가로 발전하면서 국가의 기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정활동은 정부의 기능에 따라 집행하도록 헌법과 각종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시다. 정부의 기능은 ① 공공재 공급을 통한 자원배분, ② 소득·경제적 기회의 분배 및 재분배, ③ 경제의 안정화 기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작성】

김명규 부연구위원
mkim@kpfis.kr

Q3.1 공공재가 무엇인가요?

공공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공공재는 비배제성(non-exclusiveness)과 비경합성(non-rivalry)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비배제성은 경제주체의 소비가 다른 경제 주체의 소비를 배제하지 않는 특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화를 공동소비할 때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비배제성은 소비자들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유인을 하게 되어 무임승차 문제²⁾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비경합성은 재화를 추가 소비할 때 추가 비용이 거의 없는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상영 시 한 명이 더 보더라도 극장에서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거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공공재 특성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공공재는 집단으로 공급되며 개인은 소비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방서비스를 보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해외로 이주하지 않는 이상 소비에서 배제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표 1〉 재화의 특성

구분		경합성	
		있음	없음
배제성	있음	사적재화 빵, 유료도로	집단재화 영화, 방송서비스
	없음	공유재 공유지, 해양자원	공공재 공원, 국방, 치안, 가로등

공공재에는 국방, 치안 서비스 등이 있으며,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것이 특징

재화에 따라서 그 특성상 민간부문에서의 생산보다는 공공부문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필수품이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생산시 적자가 예상되면 생산을 중지할 것이고,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여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러면 국가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제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2017),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는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소비 수요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공급하게 되지 못하게 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을 통해 정부가 재화를 직접 공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철도, 우편 사업 등 공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 이와 같은 사업을 민간에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Q3.2 공공재 공급을 통한 자원배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이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공재를 제공(생산)합니다. 공공재(공공재화 또는 공공서비스)에는 도로와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과 국방, 치안유지와 같은 안전보장을 위한 공공재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국민의 인적수준 향상을 위한 의무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공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제공



Q3.3 소득경제적 기회의 분배 및 재분배는 어떤 기능인가요?

시장경제 하에서 자원 배분은 소득 분배에 있어 불공평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소득과 경제적 기회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역기능을 바로 잡기 위해 재정지출 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해 재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에서는 이전지출(transfer expenditure)의 유형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부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식품 등 재화와 의료서비스 등을 현물로 무상지급하거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여 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제도를 통해 은퇴 노령자나 산업재해 장애인과 유가족 등에게 혜택과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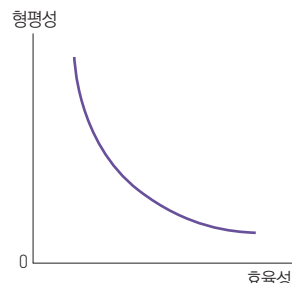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진적 소득세제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되며, 또한 담세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납세 여력이 더 많은 소득계층에게 더 부과·징수하여 저소득 계층에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3.4 소득 재분배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나요?

소득 재분배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지니계수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소득 재분배가 공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는 2013년(0.336) 이후로 증가하여 2016년 0.353으로 소득 재분배가 악화되었습니다. 시장소득기준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차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의미하며,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도 소득격차를 다소 해소하는 정책효과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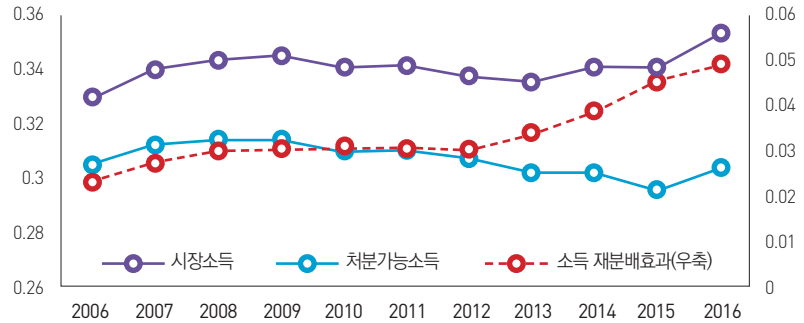
지니계수 이외에도 5분위배율, 10분위 배율, 십분위 분배율 등의 지표도 소득 재분배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그림 1. 형평성과 효율성의 상충관계



이전지출과 조세기능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그림 2. 지니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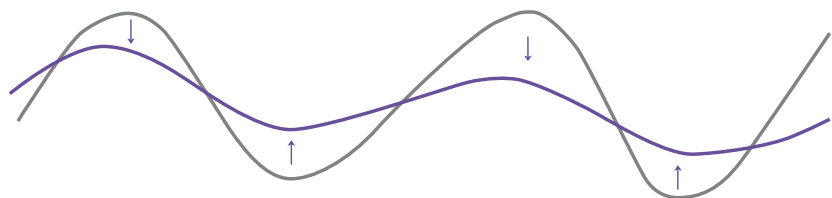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정부는 경기변동을
안정화하여
경제 불확실성 완화

Q4 경제의 안정화 기능은 무엇을 말하나요?

사람의 신체나 감성에 ‘바이오 리듬’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경제 상태도 마찬가지로 주기에 따라 좋고 나쁨을 반복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경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국내외 경제 요인의 변화로 국내 경제가 변동하는 경우 고용상황과 소득수준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특히, 급격한 변화는 경제주체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커져 국민과 기업이 경제적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정부는 경기 변동 폭을 줄여 경제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크기를 나타내는 GDP(국내총생산)는 민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수출-수입)로 구성됩니다. 갑자기 경기 상황이 악화되어 소비와 기업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정부는 재정확대정책을 편성하여 충격을 완화하도록 유도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경기 진폭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경제 안정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림 3. 경기변동과 안정화 기능



Q4.1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소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기 안정화

Q4.1 소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기 안정화에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자동안정화장치(auto built-in stabilizer)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와 실업수당 정책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 소득이 높아지게 되고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 납부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소비 증가세를 다소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반대의 경우, 소득이 낮아져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를 더 적게 내면 소비여력이 커져 소비가 늘고 경제가 안정됩니다. 실업수당 정책도 심각한 불황 상황에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경기국면에서 안정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상태로 전환되면 고용보험을 통해 일정 기간 실업수당을 받아 소비를 함으로써 경기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누진세율 소득세제와
실업수당은 대표적인
경기 자동안정화장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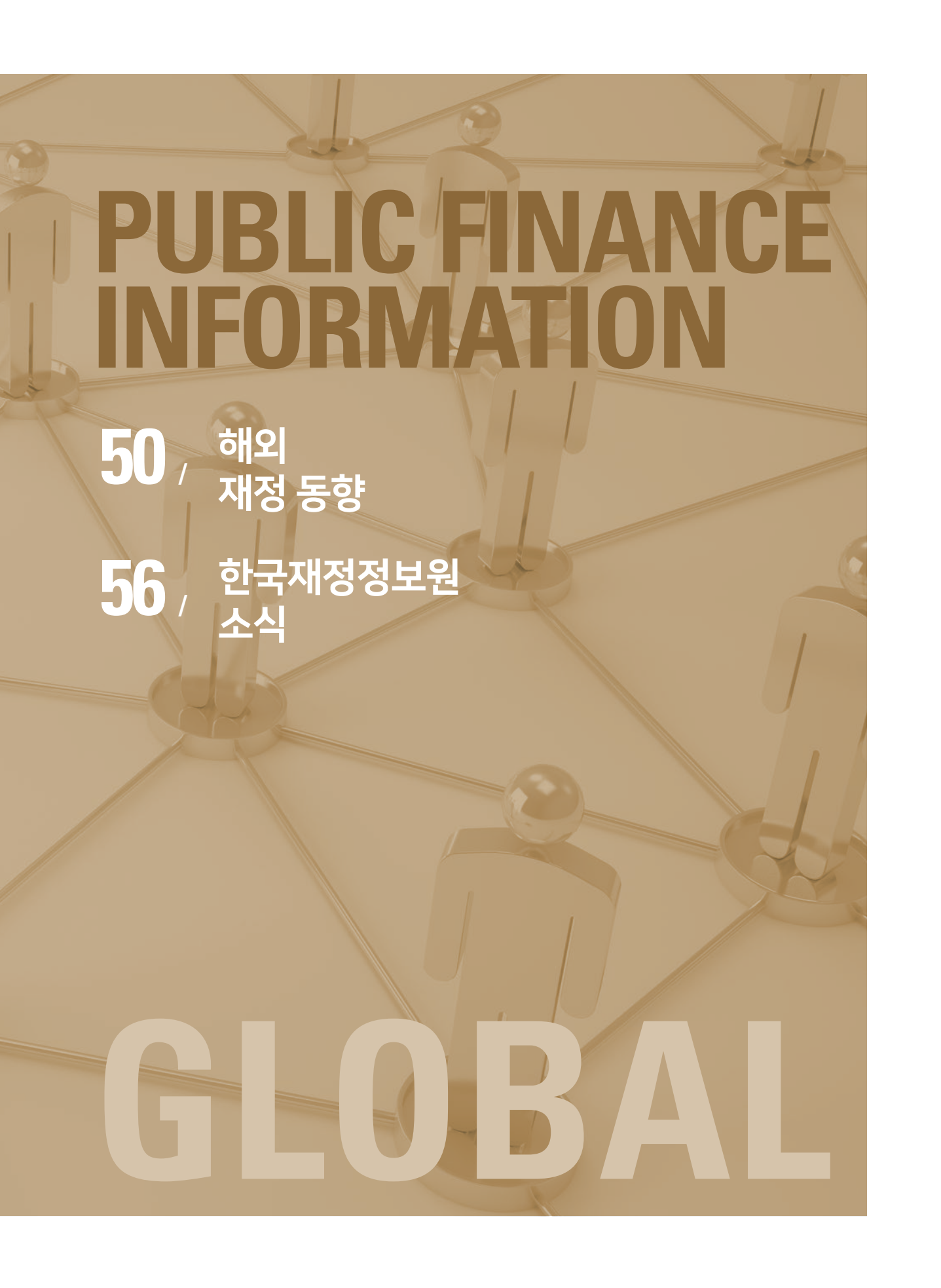


MONTHLY

동향과 소식

GLOBAL FISCAL TRENDS & KPFIS NEWS

해외 재정 동향과
한국재정정보원의 새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50 / 해외
재정 동향

56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GLOBAL



해외 재정 동향

해외 재정 동향

미국 의회예산처, 장기 재정·경제 전망 수정 발표

- CBO¹⁾,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7 to 2027(2017. 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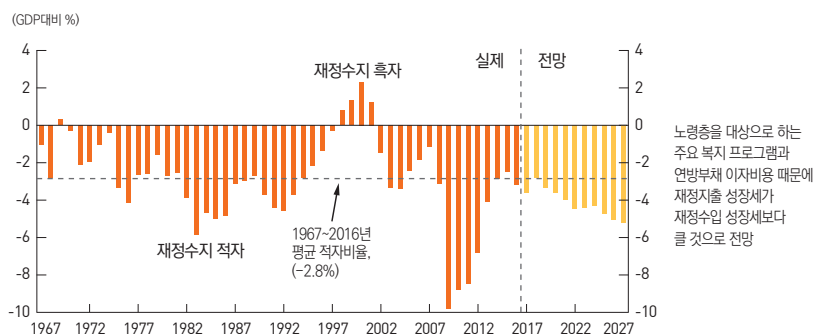
- 미국 의회예산처는 6월 재정 경제 수정전망에서 경제 성장 부진으로 재정 건전성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
 - ▶ 미국경제는 2018년까지 연평균 2% 수준, 2027년까지 1.9%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 저성장으로 인한 세수 대비 지출 증가로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7~2018년도 단기 정부 재정수지 전망
 - ▶ CBO는 2017년도 정부수입 전망을 890억 달러 낮춘 반면, 지출은 450억 달러 높임에 따라, 재정적자는 6,930억 달러로 1월 예상보다 1,34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GDP 대비 정부 지출은 지난해 대비 0.2%p 증가(20.7% → 20.9%)
 - ▶ 연방재정지출의 증가 요인은 교육 및 주거에 대한 대출·대출담보 보조금 지출증가 등의 의무지출 요인임
 - ▶ 2018년도 지출은 2018년도 사업 지출액의 일부가 2017년도에 지출됨에 따라 450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장기 정부 재정수지 전망
 - ▶ 장기적 지출 증가 요인은 사회보장, 메디케어²⁾, 메디케이드³⁾,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부채 상환이자 증가 등임
 - ▶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은 GDP 대비 현행 21% 수준에서 2027년에는 23.6%까지 상승할 전망
 - 의무지출은 노령층 대상 사회보장 지출이 주된 요인으로 인해 2017년 2.5조 달러 규모에서 2027년 4.3조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재량지출은 2017년 1.2조 달러에서 2027년 1.5조 달러로 상승할 것이나, 경제성장률이 재량지출 증가세를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DP 대비 규모는 6.3%에서 5.4%로 감소
 - ▶ 이에 따라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비중이 2017년 3.6%에서 2027년 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작성】

박정수 부연구위원
mymajesty@kp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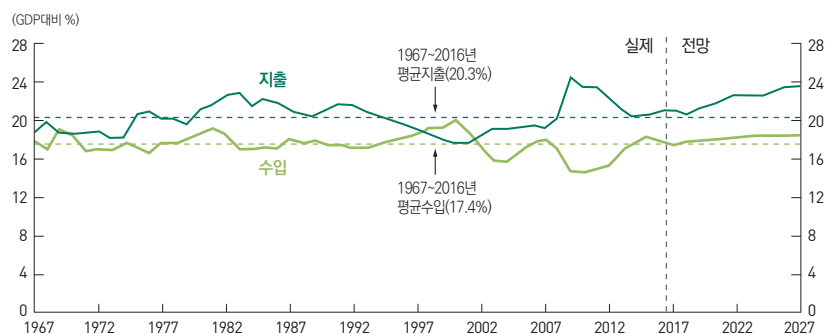
강나연 연구원
nykang@kpfis.kr

그림 1. 재정수지



※출처 : Congressional Budget Office(미국 의회예산처)

그림 2. 총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 공공보유채무(debt held by the public)⁴⁾ 추이

- ▶ 재정적자 누적에 따라 공공보유채무는 2027년 26조 달러에 달할 것이며, 이는 1947년 이후 최대규모임(2017년 기준 15조 달러)
- ▶ 정부 부채는 생산성 및 임금 등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경기 후퇴 등 긴급 상황 시 조세 및 지출 조정을 통한 대응 여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침
- ▶ 정부 채무 발행은 장기적으로 채권 수익률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며⁵⁾, 채무 증가가 지속되면 재정위기를 야기할 수 있음

1)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미국 의회예산처

2)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연방정부가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공공 의료보험제도

3) 국민총에게 연방-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공공의료보험

4) 연방정부 이외에 미국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내와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 보유된 채무이며 미 연준이 보유한 채무도 포함됨

5) 투자자의 투자 유인은 채권의 수익률과 정의 관계가 있으며, 일정한 수익률이 담보되지 않으면 채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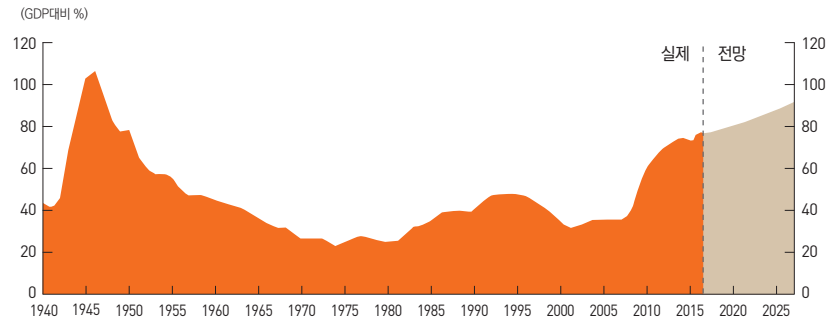


해외 재정 동향



해외 재정 동향

그림 3. 공공보유채무



※출처 : Congressional Budget Office(미국 의회예산처)

◆ 시사점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은 세입 및 지출에 대한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음. 특히 지출 측면에서 보건·사회보장·연금 지출 등 사회 전반의 노령화 추세에 따른 지출 증가를 예측, 추계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함. 또한 재정수지 악화는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을 제약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

영국 예산청, 재정위험보고서 발간

- OBR⁶⁾, Fiscal Risks Report (2017. 7. 13.)

- 영국 예산청은 기존의 중장기 재정추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재정위험보고서를 통해 정부 재정에 대한 위험 요인을 분석
- ▶ 재정위험보고서는 영국 의회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작성됨
- ▶ 거시경제, 금융위기, 정부수입, 정부지출, 재무상태표, 정부부채 이자지급 등 재정위험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재정 스트레스 테스트⁷⁾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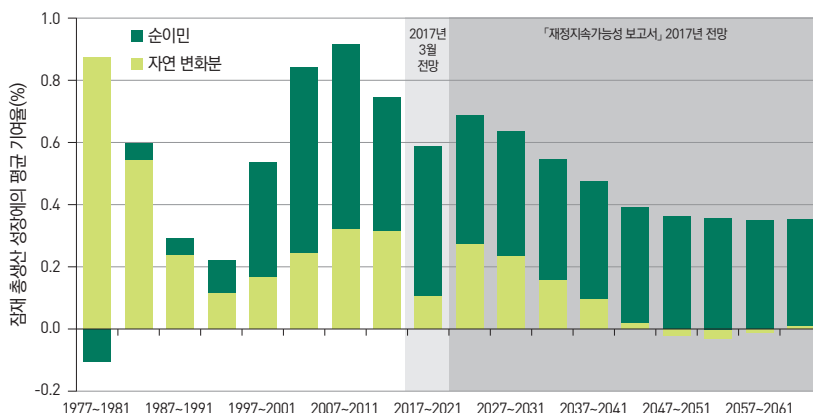
6)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영국 예산청

7)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경제가 악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충격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건전성을 판단하는 테스트. 그동안 주로 금융권에서 활용되어 개별 금융회사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해 왔음

● 거시경제 위험

- ▶ 거시경제 위험은 주로 잠재적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에 대한 것으로, 순이민(net migration)을 포함한 인구성장, 노동인구 비중, 시간당 생산성, 근로자의 노동시간 등에 의해 결정됨
- ▶ 잠재 생산성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많이 하락한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 잠재성장률은 최근 순이민으로 인한 노동인구 증가로 높아졌으나 브렉시트는 이 추세를 약화시킬 수 있음
- ▶ 잠재적 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는 장기 경제규모 및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거시경제의 또 하나의 위험요소는 경기순환 주기로, 경기 둔화는 재정수입 약화와 공공서비스 지출 증가를 동반

그림 4. 잠재성장률에 성인 인구성장률의 기여분



※출처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영국 통계청)

● 금융위기 위험

- ▶ 영국은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보다 큰 만큼, 금융위기가 세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 금융위기는 두 가지 재정비용을 야기
 - 직접비용은 구제금융비용 및 구제금융에 실패한 기관을 국영화하는 비용
 - 간접비용은 경기침체에서 비롯되는 비용
- ▶ 구제금융 및 국영화 비용은 지난 금융위기 당시 1,370억 파운드
- ▶ 금융위기로 인한 장기 경기 불황으로 간접비용이 크게 발생, 이로 인한 손실로 현재 경제 규모는 위기 이전에 비해 15%정도 축소
- ▶ 직·간접 비용이 크기 때문에, 영국예산청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함을 권고



해외 재정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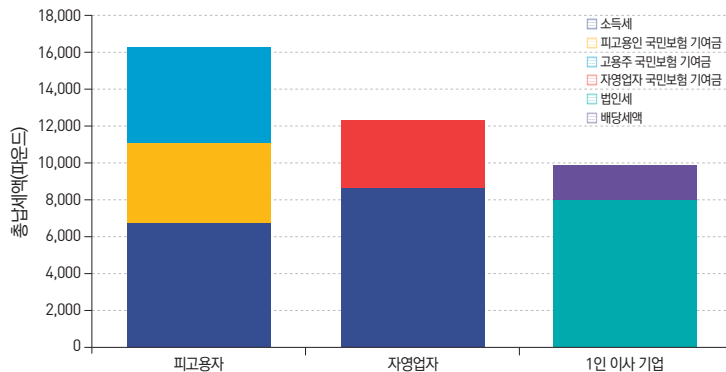


해외 재정 동향

● 정부수입 위험

- ▶ 평균소득 수준에서의 담세력 즉 실질부담세율은 피고용자가 자영업자보다 높음
- ▶ 현재 자영업자 비중의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2021~22년 재정수입을 약 45억 파운드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됨
- ▶ 또한 담세력이 높은 고소득자와 자산가 수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수입의 감소를 유발

그림 5. 2017~18년 5만 파운드 소득자의 세금부담



※출처: OBR(영국 예산청)

● 정부지출 위험

- ▶ 인구 고령화와 개인 연금수급액 증가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⁸⁾는 장기적으로 정부지출의 위험요인임
- ▶ 보건·의료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장기전망에 따르면 50년 후 인구고령화·새로운 의료 기술의 도입에 따라 1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 최근 증가하는 총당금 및 우발채무 증가 역시 지출 위험에 해당

● 정부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위험

- ▶ 정부 재무상태표는 중앙/지방정부의 자산 및 부채 정보를 담은 것
- ▶ 특히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정부 부채는 재무상태표 및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 부채 증가는 최근 금융위기 회복과정에서 은행의 유상증자, 국유화 및 영국 철도회사 Network Rail의 공기업화 등을 통해 발생

8) 영국 기초연금제도에 적용되는 트리플록(triple lock)은 인플레이션율, 평균소득증가율, 고정금리 2.5%중 가장 높은 것을 채택하여 연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연금수급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최소 2.5%씩 상승하게 됨

9) 실질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 마이너스일 경우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큼



해외 재정 동향

● 정부부채 이자 지급 위험

- ▶ 정부부채 총량은 위기 이전보다 증가하여 2016~17년 1.7조 파운드, 이자 지출비용은 350억 파운드에 달함
- ▶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충격은 GDP 성장과 비례하여 금리가 상승, 이자지급 비용도 증가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것임
- ▶ 정부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더 강력하게 기초재정수지를 달성해야 함
- ▶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추가 재정수입은 정부부채 이자지출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음

● 재정 스트레스 테스트

- ▶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적자는 GDP의 8%까지 상승하고 순부채는 GDP의 114%까지 상승
 - 심한 불황 : 실질GDP는 2017년 내 4.7% 하락, 아웃풋갭^①은 2017년말 마이너스 3%
 - 자산가치 하락 : 2017년 말까지 주가는 45% 하락, 유가는 30달러 미만으로 하락
 - 파운드가치 하락 : 2017년 내 실질가치 30% 하락
 - 잠재생산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충격 : 2017~21년까지 연평균 0.5% 하락
- ▶ 중기 주요 위험은 경기 침체와 약화되고 있는 생산성 성장세(경제적 측면), 이자지출 비용 및 보건지출(지출 측면)
- ▶ 장기 주요 위험은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경제적 측면), 고령화 및 보건비용(지출 측면), 고용 구조변화로 인한 세입 감소(수입 측면) 등

● 브렉시트 여파가 영국 재정에 미칠 영향

- ▶ 브렉시트는 인구 순유입 감소, 잠재생산성 성장 약화 등을 통해 경제적 위험을 키울 수 있음
- ▶ 브렉시트에 따른 정부 지출 예상치는 750억 파운드로, 2019~20년 GDP의 3% 수준이며, 이는 일시적 충격이므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는 아님
- ▶ 그러나 향후 EU 가입국 및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 변화로 인해 장기 성장잠재력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우려됨

◆ 시사점

정부는 정책 결정 전 재정 위험 관리를 잘 해야 함. 특히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기 불황, 금융위기와 같이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화 비용, 의료 기술 발전, 약한 생산성 성장, 세원의 감소 등 정책 대응의 적기를 잡기 어려운 장기적 재정 부담 요인들도 고려해야 함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dBrain시스템 개선 및 열린재정·재정분석시스템 고도화 추진

- dBrain운영본부는 7월 6일, '17년도 dBrain시스템 개선 및 열린재정·재정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
- 아울러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 간, 열린재정(대국민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재정콘텐츠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및 스토리텔링 공모전 「열린재정에 바란다」를 개최
-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고도화 사업 시행에 적극 반영할 계획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증액된 국고보조금 조기 집행 추진

- 16개 부처, 66개 세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2조 원(59.6 → 60.8조 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조기집행 TF'를 구성*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금 추경분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 중(7. 24~)
-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고보조금 추진단, 부처 상황반,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국고보조금 집행 상황을 일 단위로 점검, 지원하여 국고보조금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PFIS NEWS

타지키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 재정정보시스템(dBrain) 강의

- 한국재정정보원은 타지키스탄 재무부, 대통령실 등 재정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국 전자정부 역량강화 연수단(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정개혁 및 dBrain시스템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
- 타지키스탄 연수생들은 다수의 질의를 통해 타지키스탄의 재정정보시스템과 비교 등 간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추진 중인 타지키스탄 재정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에 기여



탄자니아 공무원 한국재정정보원 방문

- 탄자니아 재무부, 중앙은행, 국세청 등 거시경제 분야 정책 실무자들이 7월 23일 KDI KSP 사업으로 진행 중인 예산배분시스템 개선 과제의 현장 체험 일환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
- 한국재정정보원은 프로그램예산제도가 반영된 dBrain을 소개하고, 관련 시스템 기능을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함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 도입

- 한국재정정보원은 앞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위하여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www.kpfis.or.kr)

희망주는 국고보조
믿음주는 투명관리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하고 열린 정부의 시작!
투명하고 꼼꼼한 관리로 국고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시스템

보조사업의 모든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에게 맞는 보조사업 맞춤형 검색
- 보조사업자 공모현황에 대한 통합 검색, 보조사업 집행현황 및 통계공개
- 질의응답, 정책제안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참여와 소통 채널

세금낭비 방지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고
정확해졌습니다

- 보조사업 7단계(신청/집행/사후)검증으로 중복·부정수급 방지
- 보조금 통합예치, 지출증빙자료 검증 후 실시간 집행
- 보조사업 전 처리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행정

복잡한 보조금 업무가 표준화,
자동화 되었습니다

- 정산보고 자동화 등 수작업 대폭 감소
- 행정관청 방문없이 보조사업 응모 가능
- 자료분석으로 과학적 보조금 정책지원

희망주는 국고보조, 믿음주는 투명관리, e나라도움(www.gosims.go.kr)이 국민과 함께 합니다

※ e나라도움 관련 문의는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국번없이) 1670-9595(국고국고)

월간

나라 재정

8월호

월간 나라재정 2017년 8월호

통권 제8호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이원식(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편집위원장

박용주(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본부장)

편집위원

강영규(기획재정부 재정기획총괄과장)

최병호(부산대학교 교수)

이원희(한경대학교 교수)

연훈수(한국재정정보원 연구위원)

박소영(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한승희(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김도일(한국재정정보원 연구원)

디자인제작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재정 전문 연구기관

재정의 통합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과 소통하는 재정 운영 지원

통합체계적 재정정책
통계 분석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관리 지원

- 재정 통계 분석 기법 개발
- 재정 통계 분석 및 재정정보 공개

- 각종 재정사업 평가 및 관련 연구
- 재정 정책 전반 연구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